

광주시 '區 경계' 조정 급하다

광산구 인구 10년새 49% ↑ 동구 25% ↓
행정·행정서비스 격차도 날로 커져

■ 광주시의 자치구간 불균형

	최근 10년새 인구변화 (1996~2006)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동구	14만8천명→11만1천명	105
서구	22만7천명→31만명	68
남구	25만3천명→21만3천명	121
북구	46만2천명→46만명	94
광산구	20만8천명→31만명	71

박광대 광주시장과 유태영 동구청장 등 5개 구청장들이 최근 가진 회동에서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구간 경계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3개 구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광주시역 단체장의 당적(민주당)이 동일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 구간 경계조정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이는 광주시의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 규모가 도시 변화와 상관없이 지난 10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자치구 간 인구와 재정, 행정서비스 등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 동구와 남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의 월급마저 줄 수 없어 전적으로 시와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북구의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타 구에 비해 2~3배 가량 많아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는 만큼 구간 경계 조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수년 동안 제기돼 왔다. 신도시 개발과 도심공동화의 진행으로 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난 2001년 광주시는 용역과

시민공청회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동구와 남구가 수년 동안 경계조정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동구는 최근 '경제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경계조정에 구의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선자치 출범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의 확장으로 광산구와 서구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구와 남구는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인구 변화를 보면, 동구는 1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남구는 25만명에서 21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광산구는 17만명에서 31만명으로 늘었다. 북구는 9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47만명대에서 정점을 이뤘으며, 이후 46만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재정 악화로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5개 구의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동구는 105%, 남구가 121%나 돼 자체 수입만으로는 최소한의 경비인 직원들의 월급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비해 서구는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68%, 광산구 71%, 북구 94% 등이다. 한편 광주시의 구간 경계는 지난 95년 광산구의 서창출장소와 대촌출장소가 각각 서구와 남구로 편입·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靑, 개헌 국민설득 '총력'

盧大統領 "시간상 두번도 가능" ... 법무부 '추진단' 발족

청와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선 반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개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개헌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임채정 국회 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이 정당적 의도라는 한나라당 등의 주장과 관련,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당적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당적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간적으로 87년의 예를 비교하면 지금도 (개헌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히는 한편,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대로 되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11일에도 여야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치권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며 13일부터 예정된 '아세안+' 순방 이후에도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각계 여론수렴 자리는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철철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많은 국민의 여론이 받쳐준다면 (연임제 개헌)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여론수렴과 설득작업이 향후 청와대 행보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도 이날 김성호 장관의 지시로 '헌법개정실무추진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추진단을 통해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절차와 대통령 임기 관련 규정 등 법적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헌 카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결의문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 논의의 주장은 국정 실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정국 주도권 장악 및 재집권을 위한 국민전환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개헌 논의에 일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



지난 4일 목포영어체험마을에 참가한 목포시내 초등학생들이 우체국 체험실에서 원어민 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 영어마을'서 배워라

빈교실 활용 비용 절감·수업료 파격 지원...성공 모델로 떠올라

도심지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실속형 영어마을이 새로운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지난해 12월 28일 문을 연 목포영어체험마을은 수백여명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존 영어마을과는 발상부터 달랐다. 빈 교실을 활용한 설립 비용 절감, 지자체의 파격적인 수업료 지원, 탄탄한 커리큘럼, 지역성을 연계한 독특한 교육방식이 잘 맞물린 것이다. 이 때문에 문을 연 지 1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방향 동안인 오는 2월 말까지 목포

지역 초등학생 1천82명이 참가 신청을 마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목포시 호남동 중앙초교 별관에 문을 연 영어마을은 2천219㎡ 공간의 3층 건물 1동과 체험실 13개를 갖추고 있다. 목포시와 시교육청은 목포시내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줄자 중앙초교의 남교실 21칸을 무상으로 임대, 21억원을 들여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쳤다. 영어마을 하면 비싼 수업료를 떠올리지만 이곳은 다르다. 참가 학생들은 수업료(평균 20만원·5일 기준)의 10~25%에 해당하는

2만~5만원으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이처럼 수업료가 낮은 이유는 목포시와 목포시 교육청이 빈 교실을 이용해 초기 건축비용을 대폭 줄인 데다 목포시가 수업료를 최고 90%까지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주)해럴드 미디어의 노하루도 성공 예감을 더한다. 해럴드미디어는 서울 풍납영어마을, 경기도 안산 화정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기관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근로자 9명 나이지리아서 피랍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근로자 9명이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 외교교통상부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시간 10일 낮 12시 50분 나이지리아 남부 바젤사주 오구지역의 대우건설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현장에서 대우건설 소속 한국인

근로자 9명과 현지인 1명 등 10명이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장단체가 다이내마이트를 터뜨리며 해안을 따라 공격해왔으며 현지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전개했으나 해안에 인접한 대우건설 숙소가 있던 한국인 근로자 등이 납치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후원대학 장학금 57만 원 지원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세경도 알아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n.ac.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전화: 062-220-0541

2006년 공동주택시책사업 우수시공이파트 선정
건설청인민공서특목 신공공기금 500억 지원